

SE♥UL M! SOUL

2024 주요업무보고

2024. 2.

재무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3팀 238명/225명 (정/현원)

재무국

(2024. 1. 31.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별도(재무과 3명, 38세금징수과 6명)

기능

과 별	주요 업무
재무과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등
재산관리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제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4,474,238	27,721,761	△3,247,522	△11.7%
시 세	24,235,274	24,112,184	123,090	0.5%
세 외 수 입	237,602	353,209	△115,607	△32.7%
보 조 금	1,362	1,511	△148	△9.8%
보 전 수 입 등	-	3,254,857	△3,254,857	△100.0%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3,142,642	3,249,714	△107,072	△3.3%
인 력 운 영 비 (통 합 편 성)	852,615	815,591	37,024	4.5%
기 본 경 비	852	2,103	△1,251	△59.5%
재 무 활 동	15,981	16,443	△462	△2.8%
사 업 비	2,273,194	2,415,577	△142,383	△5.9%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832	1,550	282	18.2%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4,353	25,351	△998	△3.9%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8	28	20	71.4%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13	1,808	5	0.3%
시세입 목표달성	13,454	5,100	8,354	163.8%
조세정의 실현	5,969	6,463	△494	△7.6%
타 기관 지원	2,225,725	2,375,277	△149,552	△6.3%
자치구 재정보전금	1,719,754	1,790,746	△70,992	△4.0%
시세 징수교부금	503,317	581,888	△78,571	△13.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54	2,643	11	0.4%

재 산 현 황 (市)

(2022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57,560	106,434(100.0%)	69,989	13,277(100.0%)
행 정 재 산	55,500	105,028(98.7%)	6,232	5,660(42.6%)
일 반 재 산	2,060	1,406(1.3%)	63,757	7,617(57.4%)

II . 정책목표 및 방향

적극적인 재정확충과 재무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

정 책 과 제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실 천 과 제

1.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시세 세입 목표 달성
2.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 확대 및 공평과세 실현
3.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
4. 세무종합시스템 인프라 개선으로 세입 안정성 확보

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2. 대시민 무료 세무상담으로 세금 약자와의 동행 추진
3.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

1.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 추진
2. 계약심사 서비스 강화로 신속발주 및 경제활력 제고
3.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시세 세입 목표 달성
2.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 확대 및 공평과세 실현
3.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액 조기 달성
4. 세무종합시스템 인프라 개선으로 세입 안정성 확보

1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시세 세입 목표 달성

- ◆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확한 세수관리, 누락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로 '24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 시세 목표 : 24조 2,353억 원(전년 대비 1,231억 원 ↑, 0.5%)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A)	(점유비)	2023년 (B)	(점유비)	전년대비	
					금 액 (C=A-B)	비 율 (C/B)
계	242,353	(100.0)	241,122	(100.0)	1,231	0.5
취 득 세	53,258	(22.0)	52,219	(21.7)	1,039	2.0
지 방 소 득 세	76,923	(31.7)	79,339	(32.9)	-2,416	-3.0
재 산 세	35,321	(14.6)	35,221	(14.6)	100	0.3
지 방 소 비 세	27,306	(11.3)	27,869	(11.6)	-563	-2.0
기 타 시 세	49,545	(20.4)	46,474	(19.3)	3,071	6.6

※ 세외수입(일반회계) 목표 : 1조 4,139억 원

□ 추진계획

- 시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
 - (목표관리)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목표관리와 세입실적 분석
 - (대책회의) 관계자 워크숍 실시 및 시·구 합동 대책 회의 개최
-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 및 과소신고 재조사로 적극적 세수 증대
 - (중과조사) 주택 중과 유예기간 경과자 예외요건 충족여부 전수조사
 - ※ 조사대상 : 일시적 2주택자, 주택건설 사업자 등 유예기간(3년) 경과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정확한 신고납부·부과 관리 추진
 - (협업체계) 서울지방국세청·자치구와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5월)
 - (교차검증) 국세청 자료(개인·법인) 기반 최신 데이터 활용 과세자료 정밀 관리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 세 징 수 교 부 금	503,317,200	125,829,300	125,829,300	125,829,300	125,829,300

□ 추진일정

- 관계자 워크숍 실시 : '24. 4월
- 주택 중과 유예기간 경과자 전수조사 : '24. 5월
- 시·구 합동 대책 회의 개최 : '24. 6월 / 10월

2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 확대 및 공평과세 실현

- ◆ 기업 공시자료 및 전산 과세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발굴 목표 달성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

□ 세원 발굴 목표 : 800억 원(시 500억 원, 자치구 300억 원)

- [시] 전년 대비 목표 상향(50억 원 ↑) : ('23년)450억 원 → ('24년)500억 원
- [자치구] 부동산 경기 감안 '23년 수준 유지 ⇒ 300억 원

□ 추진계획

- 자치구 지도점검을 통한 세원 누락 방지
 - 13개 자치구(25개 자치구 격년제 실시) 현장 출장하여 취득세신고 처리 실태 등 지방세 세원 누락 여부 점검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적정부과 여부 등 점검
- 기업 공시자료 분석 등으로 내실 있는 세무조사 추진
 - 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분석으로 취득세 신고 누락 등 세원 발굴
 - 공사비 축소 신고, 가족간 편법 거래 등 세무조사에 금융정보 적극 활용
 - 세무전산시스템의 과세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세원관리로 탈세 원천 차단
 - 시·구 합동 세무조사로 시·구 및 區 상호간 세무조사 기법 공유
- 납세자 불복청구 시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철저히 대응
 - 조세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세심판, 소송 등 납세불복 대응
 - 법원 판례, 조세심판 결정례 등 기존 사례 분석으로 불복대응 논거 확보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방세 불복 대응 비용	227,000	56,750	56,750	56,750	56,750

□ 추진일정

-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 : '24. 1~4월
-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 '24. 5~12월

3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

- ◆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국가기관 등 협업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시세 징수목표 조기 달성

□ 체납징수 목표액 : 2,222억 원

□ 추진계획

-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 분석을 통한 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 외국은행, 산림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권 조사범위 확대
 - 재산 편법 증여, 타인명의 위장사업, 금융투자상품(펀드 등)에 재산은닉행위 추적
- 1조사관 2소송·범칙행위 고발 확행으로 재산 은닉자 강력 대응
 - 사해행위취소, 상속대위등기, 근저당·가처분 말소 등 소 제기 강화
 - ▶ 소 제기 건수 : ('23년 실적) 14건 ⇨ ('24년 목표) 40건
 - 체납 면탈 범칙행위 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감치 등 적극 조치
- 국가기관 등과 협업하여 체납자 추적 및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 전개
 - 관세청·건강보험공단·경찰청·도로공사와 체납자료 공유 등 협력 징수활동 전개
- 압류재산 및 체납자 실태조사 등 촘촘한 재검토로 체납채권 소멸 방지
 - 시효 경과된 부동산 근저당권, 가처분, 가등기 말소 소 제기로 우선순위 확보
 - 뉴딜일자리(7명)와 협업하여 체납자 실태조사(거소·사업장)로 체납 관리 강화
- 현장 징수활동 동행·기획취재(교양, 시사, 예능) 발굴 등 방송매체 집중 홍보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액 체납 시세 징수	635,190	158,800	158,800	158,800	158,790

□ 추진일정

- 외국은행, 산림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권 조사 : '24. 3월~
- 국가기관 등 협업하여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 : '24. 3~5월
 - 건강보험공단(3월), 관세청(4월), 경찰청·도로공사(5월)

4

세무종합시스템 인프라 개선으로 세입 안정성 확보

- ◆ 市 세무종합시스템의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및 행안부 차세대 기능 공동 활용을 통해 세입 부과·징수의 안전과 보안성 제고

☐ 추진근거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77호, '23.7.28.)
-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서울시 통합 사업 과업 변경 계획(안)(세무과-18274, '23.10.4.)
- 행안부의 인프라 교체 의견 회신(지방세정보화사업과-1993호, '23.12.6.)
 - 세무종합시스템은 완전한 통합에 어려움이 있고, 장비 장애 빈도 증가로 인프라 교체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 사업기간 : '24. 6월~'25.10월(계약 후 16개월)
- 주요내용
 - (상용 S/W) UI 솔루션 등 신규제품 구매와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11종)를 통한 보안성 강화
 - (업무프로그램 전환) 상용SW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환(4,810종, 총 8,658종 중 55%)
 - ▶ 공통(997종), 부과(2,742종), 징수/채납 등(1,071종)
 - (공동활용)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신서비스 공동 활용
 - ▶ 전자서고, 빅데이터 분석, 다차원 통계 등 연계 개발 등
- 사업비 : 총 83억 원 ※ 서버는 데이터센터에서 별도 구입 추진(52억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8,267,532	-	-	-	8,267,532

☐ 추진일정

- 발주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24. 2월
-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 '24. 2월
- 사전공고, 본공고 : '24. 3~5월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2. 대시민 무료 세무상담으로 세금 약자와의 동행 추진

3.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

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 ◆ ‘광역단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국토부-서울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 방향 모색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추진배경

- 공시가격은 시민과 우리 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산정과정에서 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은 국토부 단일 체제로 개선 필요
 - 국토부(부동산원)의 공동주택 등 가격 산정 및 자체 검증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의 공시가격 상시검증 체계 도입 추진 중
 - 지속적인 사도 검증센터 설치 건의에 따라 국토부에서 우리시와 협력사업 추진 발표('23.10월)
 -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용역 공동수행 착수('23.12월~)

□ 추진계획

- 국토부-서울시 협력사업을 통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초안 마련
 - 광역단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상시 검증 제도·절차·방식·법령 등 제도 설계
 - 국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공시가격 검증센터 최종안 도출
 - 공시가격 실태조사 대상 범위 전 자치구로 확대('23년 9개구→'24년 16개구 추가)
 - 타 시·도와 소통·협력 강화로 중앙과 상호검증하는 검증센터 설치 방안 마련
- ※ '23.10.15. 국토부 발표, 공시제도 개선 방안 중 '철저한 검증' 분야 협업 추진
⇒ ('23년) 서울시와 협력사업 추진, ('24년) 2~3개 지자체와 시범사업 추진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자체 검증센터를 통한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검증	151,500	-	9,620	100,000	41,880

□ 추진일정

- 광역단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초안 설계(국토부-서울시) : '24. 3~7월
- 국토부 시범사업 참여 및 최종 설치안 마련 : '24. 7월~

2 대시민 무료 세무상담으로 세금약자와의 동행 추진

- ◆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마을 세무사 제도 재설계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수요집중시설로 확대하여 수혜지역 다변화
- 무료 세무상담 내실화로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 및 권익 보호 강화
※ 추진실적 : '23년 4,407건, 총 누적 35,385건('15~'23년) 세무상담

□ 추진계획

- 1동 1세무사 폐지, 무실적 동 통폐합 및 자치구별 관리로 효율적 운영

'22~'23년(제5기) : 428명

➡

'24~'25년(제6기) : 296명
 - 시민 만족도가 높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수요집중시설로 확대(1월~)
 - 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 협조를 통한 상담기관 수요조사 사전 실시(1~2월)
 - 복지관, 전통시장 및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수요집중시설 총 42회 시행
※ ('23년) 복지관 10회, 전통시장 등 25회 총 35회, 305명 현장 세무상담 실시
 - 제6기 마을세무사 출범에 따라 시민과 동행을 위한 홍보 강화(2월~)
 - 다중이용시설(동주민센터, 은행 등)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2월)
 - 시 및 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에 마을 세무사 명단 현행화 및 자치구 소식지 게재, 전광판 표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 운영	16,628	10,628	2,000	2,000	2,000

□ 추진일정

- 복지관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 : '24.1월~
- 제6기 마을세무사 리플릿 제작·배포 등 제도홍보 강화 : '24.2월~

3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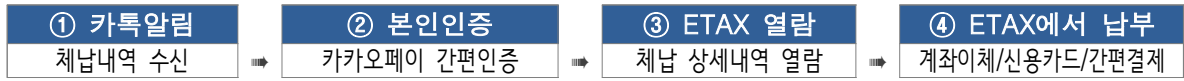
- ◆ IT의 발전,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카톡 알림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및 환급, 세외수입 체납 등을 안내하는 등 시민 편의 증대

□ 추진방향

-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운영('23.11월~)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 現 시범운영 개요 >

- ▶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카톡 체납 안내 수신
- ▶ 본인인증 후 ETAX(모바일웹 포함)로 연계된 체납 상세 내역 열람 및 납부



- 탄소저감 및 징수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전자송달 활성화
 - '23년 전자송달률 22.7%, 자동납부율 5.3%로 지속적인 확대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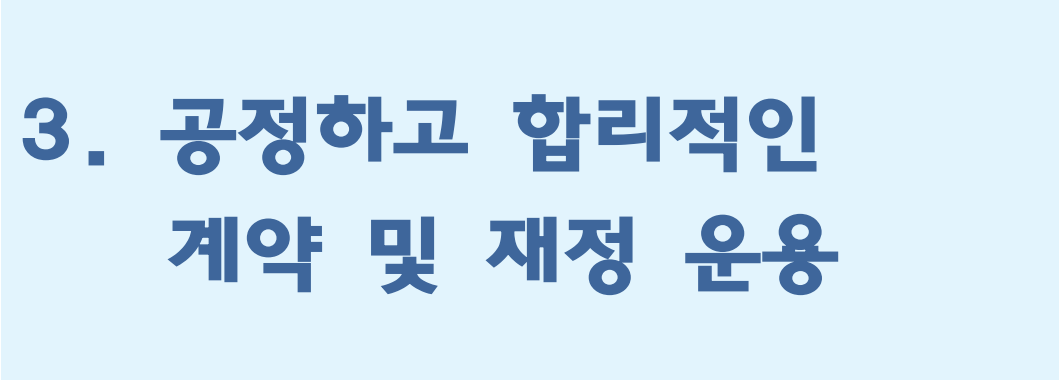
□ 추진계획

- 스마트폰 체납 알림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환급·세외수입 분야로 확대
 - 체납 수신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알림 대상을 기존 카카오페이 회원(30백만명)에서 카카오톡 회원(42백만명)으로 변경 ⇒ 수신대상 약 12백만명 증가
 - 지방세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분야로 카톡 알림 서비스 확대
-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납부기한 카톡 알림 서비스 제공
 - 지방세 정기분 고지 후 납부기한 도래 전에 카톡 알림으로 납부기한 등 안내 및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서비스로 연계하여 신청률 제고
- 어르신 대상 손쉬운 ETAX 세금납부,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교육 실시
 - 자치구 정보화교육과 연계하여 과정 개설 및 콘텐츠 제공 등
 - 자치구(5곳)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전 자치구로 확대

※ 예산집행 계획 : 비예산 사업(시금고 이행사업)

□ 추진일정

- 체납안내 서비스 개편 및 확대 시행 : '24. 4월
- 어르신 ETAX 교육 추진 : '24. 5월
- 지방세 납부기한 카톡 알림 시행 : '24. 7월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 추진

2. 계약심사 서비스 강화로 신속발주 및 경제활력 제고

3.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1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 추진

- ◆ 서울시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맞춤형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

-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일·생활 균형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
 - ▶ 市 재량이 인정되는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일·생활 균형 가산점 신설(2점)**
 - 공공계약 수행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계약 단계별 **계약 절차 간소화로 계약대금 신속 집행**(~'24. 6월)
 - (입찰공고) 경쟁입찰 시 긴급입찰공고 실시(최대 40일→5일),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기간 단축(7일→3일 이내)
 - (대금지급) 준공 시 검수기간 단축(14일→7일), 선금(14일→3일) 및 대금(5일→3일) 지급 기간 단축
-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등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 수리 등 실적증명 서비스 제공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 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 이상 공사 및 20억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 개최 주기 : 매월 1회 정기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255,926	57,750	57,750	57,750	82,676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433	6,750	6,750	6,970	6,963

추진일정

-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24. 4월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 : '24. 6월

2

계약심사 서비스 강화로 신속발주 및 경제활력 제고

- ◆ 민간 협력 「서울형 품셈」 개발과 「사전검토제」 분야 확대 등 계약심사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속 발주 및 경제활력 제고

□ 추진방향

- 계약심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민·관 협업방식 품셈 개발 확대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의 조기발주 적극 지원

□ 추진계획

- 민간 협력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
 - 기존 관 주도형에서 민간과 협업을 통한 개발로 설계품질 및 시공 안전성 제고
 - ※ '11년부터 市 자체 개발해 오던 것을 민간 참여형으로 확대('11~'23년 130건 개발)
- 공사 분야에 한정하던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일반용역 분야 확대
 - 계약 사전절차(일상감사 등) 진행 중 심사자료 및 원가산정 적정성 검토 병행
 - ※ '23년 실적 : 공사 분야 1,605건 중 358건(22.3%) 사전검토(보완율 11% → 5%)
- 신속발주 지원을 위한 '집중 심사기간('24년 1~6월)' 지정·운영
 - 집중 심사기간 및 분야별(공사·용역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3일 이내로 처리기간 단축
 - ※ 평균 처리기간 단축 : '21년 3.5일 → '22년 3.2일 → '23년 3.0일

〈 대 상 〉	〈 현행기준 〉	〈 추진목표 〉
공사·용역·구매	10일 이내 처리	3일 이내 처리

- 유사사업 일괄 통합심사 및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등 계약심사 효율화
 - 유사사업 일괄 통합심사로 기간 단축, 심사 불필요 사업 등은 한시적 심사 제외
 - ※ '23년 추진실적 : (일괄 통합심사) 9개 유형 224건 처리, (한시적 심사 제외) 7개 부서 111개 사업 지정
 -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약심사 업무추진	48,000	9,500	19,500	9,500	9,500

□ 추진일정

- 집중 심사기간 지정·운영 : '24. 1 ~ 6월
- 「서울형 품셈」 개발,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등 운영 : 연중

3

2023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 ◆ 2023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환류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 결산개요

- 대상기관 : 40개 기관 282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결산규모 : 총 58조 9,572억 원(세출예산 51조 4,900억, 기금 7조 4,672억)
- 작성 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업무 추진	252,883	50,000	187,883	5,000	10,000

□ 추진일정

-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작성 : '24. 3.20.까지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35일간, 예정) : '24. 4.15.~ 5.19.
 - 제32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의원 3명 포함 15명~20명)
- ※ 결산검사 의견 건수 : '23년 74건, '22년 97건, '21년 77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24. 5.31.까지
 - 제출안건(3건)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24회 정례회) : '24. 6.10.~ 6.28.
- 결산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예산 결산 실시 : '24. 7.~ 12월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1

출출한 사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일괄 교환 지속 추진으로 시책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 및 정밀 실태조사 확대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로 재산가치 증대

□ 추진계획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지속 추진으로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
 - [1차] 경찰관서 중심의 교환계약 체결('24.1.25.) 및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조치
 - ▶ 취득 재산 : 종량물재생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등 총 19필지(545억 원)
 - ▶ 처분 재산 : 동작경찰서, 성북파출소 등 노후 경찰관서 총 10필지·29동(544억 원)
 - [2차] 잔여 경찰관서와 기재부 이외 정부부처 재산 등 2차 교환대상 발굴 추진
 - ▶ 국가 점유 사유재산 : 1차 교환 후 잔여 경찰관서·군사시설 등 44필지 35개동 검토
 - ▶ 시 점유 국유재산 : 탄천물 재생센터·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재산 등 352필지 검토
- 전문기관을 활용한 권역별 정밀 실태조사 확대로 꼼꼼한 재산관리
 - 서초·강남·송파 등 동남권 지역 대상 : 토지·건물 9,512필지 593개동
 - ▶ ('23)동북권+서대문 → ('24)동남권 → ('25)서남권 → ('26)도심권 → ('27)시계외
 - 전문기관 활용 획지 단위 전수조사로 정확한 사유재산 실태 파악 및 사후조치

현 행

- 무단점유, 필지 중심의 선별 조사
- 각 재산관리관이 단편적 사후 조치
 - 각 재산관리관이 변상금 부과·원상회복 등



개 선

- 활용용도 단위(획지단위) 전수조사
- 총괄관리관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조치
 - 매각 및 활용가능 재산 활용처 적극 발굴

-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 결산 추진
 -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190개 전 재산관리관 대상
 -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파악 등을 통해 체계적 재산관리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밀실태조사	524,900	-	-	-	524,900

□ 추진일정

- 국공유 점유재산 교환(1차 후속조치, 2차 교환대상 발굴 등) : '24. 2~12월
- 사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 '24. 5~11월
- 2023년도 공유재산 결산 : '24. 1~4월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내실있는 공유재산심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미활용 재산 및 시유재산 체납금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25~'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
 - 중장기적 市 총괄계획 수립으로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처분 도모
 - 내실 있는 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국 단위 중기계획 수립 선행
- 시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 강화**
 - 쟁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사전 심사(서면) 도입
 - 공통기준 및 취득·처분·관리 등 분야별 기준 정리로 일관된 심의기준 제시

현 행	개 선
■ 본심의 (참석) - 쟁점 관계없이 안건별 상정 방식	■ 1차 서면 심사(개별) → 2차 본심의(참석) - 1차 : 위원별 검토의견·질의사항 사전 제출 - 2차 : 1차 결과에 따라 2차 심의방법(안건별/일괄) 구분 상정

- 선제적으로 발굴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대시민 매각·대부 강화**
 - 위탁 관리기관 통해 실태조사로 발굴한 미활용 재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적극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재산 : 총 1,172건 (토지 1,077필지 [239천㎡], 건물 95동 [89천㎡])
 - 무단점유·보존부적합 재산은 현 점유자 및 인접토지 소유자에 매수 유도하고, 매각 불가능 점유 재산은 대부·사용허가로 전환
- 변상금 등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4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24.3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0,500	2,250	3,000	3,000	2,250

□ 추진일정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4. 6~10월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운영(연 5회) : '24. 3~12월
- 보존 부적합 재산 공개매각실시(연 4회) : '24. 3~12월

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 ◆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 및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가입으로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 추진계획

-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로 노후 시유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30년 이상 노후 시유건축물(약 1,300개) 중 공무원 등 담당자 자체 점검 대상(약 400개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활용(주택정책실 지역 건축안전센터 협조)
 - 합동점검 결과 정밀한 안전점검용역 필요시 **점검비**(건당 5백만원 내외) 및 시유재산에 대한 **안전 수선비 별도 지원**(건당 2천만원 내외)

현 행	개 선
■ 각 재산관리관(비전문가) 자체 점검 - 법적 의무점검 대상 외 건축물에 대한 점검관리 부족으로 관리 사각 지대 발생 우려 - 점검 후 유지보수 등 후속조치 미흡	■ 건축전문가 참여 합동 안전점검 - 전문가 점검 후 필요시 추가 안전점검 용역 실시 및 안전수선비 지급 - 연차별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유지

- **재해 발생 등에 따른 손실 대비를 위한 철저한 손해보험 가입관리**
 - 재산관리 부서의 책임 강화 및 누락 없는 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 주체 일원화
 - ※ 재산관리과 일괄가입 + 재산관리부서별 개별가입 ⇒ **재산관리부서별 예산편성 및 가입**
 - 건물, 공작물 등 손해보험 가입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보험 가입현황 전수조사 정례화**로 재산관리 강화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250,000	250,000	-	-	-
공유재산 공제보험가입	50,000	35,000	5,000	5,000	5,000

□ 추진일정

- 노후 시유건축물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및 수선비 지원 : '24. 2~12월
- 손해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 : '24. 5~6월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4,474,238,485	27,721,761,389	△3,247,522,904	△11.7%
시 세	24,235,274,000	24,112,184,000	123,090,000	0.5%
세 외 수 입	237,602,412	353,209,451	△115,607,039	△32.7%
보 조 금	1,362,073	1,510,517	△148,444	△9.8%
보 전 수 입 등	-	3,254,857,421	△3,254,857,421	△100.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3,142,642,070	3,249,713,964	△107,071,894	△3.3%
재무과	854,832,434	818,782,926	36,049,508	4.4%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591,472	591,180	292	0.0%
2023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52,883	276,388	△23,505	△8.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9,155	172,585	136,570	79.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06,600	242,792	63,808	26.3%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433	27,037	396	1.5%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88,590	90,630	△2,040	△2.3%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55,926	149,218	106,708	71.5%
기본경비	384,904	1,641,610	△1,256,706	△76.6%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52,615,471	815,591,486	37,023,985	4.5%
재산관리과	40,376,329	41,837,522	△1,461,193	△3.5%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3,480,290	23,433,000	47,290	0.2%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745,660	1,782,415	△1,036,755	△58.2%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078	135,362	△8,284	△6.1%
기본경비	42,773	43,759	△986	△2.3%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980,528	16,442,986	△462,458	△2.8%

구 분	2024년	2023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계 약심사과	120,257	95,777	24,480	25.6%
계 약심사 업무추진	48,000	28,200	19,800	70.2%
기본경비	72,257	67,577	4,680	6.9%
세 제 과	1,724,346,096	1,795,321,938	△70,975,842	△4.0%
재정보전금	1,719,754,000	1,790,745,652	△70,991,652	△4.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53,969	2,643,438	10,531	0.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62,544	179,720	△17,176	△9.6%
마을세무사 운영	16,628	12,740	3,888	30.5%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1,369,003	1,517,447	△148,444	△9.8%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244,552	96,300	148,252	154.0%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20,000	1,200	18,800	1,566.7%
기본경비	125,400	125,400	-	-
국고보조금 반환	-	41	△41	△100.0%
세 무 과	516,921,368	587,137,972	△70,216,604	△12.0%
시세 징수교부금	503,317,200	581,888,081	△78,570,881	△13.5%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53,747	248,176	5,571	2.2%
지방세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1,222,980	907,925	315,055	34.7%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7,267	89,799	△52,532	△58.5%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427,225	396,300	30,925	7.8%
시세 세원발굴 지원	110,000	100,000	10,000	1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	376,850	△376,850	△100.0%
지방세입 부과·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50,000	△20,000	△40.0%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227,000	100,000	127,000	127.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41,804	1,914,096	27,708	1.5%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8,267,532	-	8,267,532	순증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35,962	916,660	19,302	2.1%
기본경비	150,651	150,085	566	0.4%
38세금징수과	6,045,586	6,537,829	△492,243	△7.5%
고액 체납시세 징수	635,190	618,320	16,870	2.7%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89,762	2,054,412	35,350	1.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	3,244,593	3,790,582	△545,989	△14.4%
기본경비	76,041	74,515	1,526	2.0%

V.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5	15	7	3	-
	시정·처리요구사항	16	8	7	1	-
	건의사항	6	4	-	2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0년부터 현재까지 1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음. 계약이 유찰되었다면 이를 수의계약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약에서는 기준에 맞게 진행해주길 당부함.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공개입찰로 발주하였으나 업무 난이도 등으로 유찰되어 사업 적기 추진 등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임 ○ 공개입찰 시 유찰된 건의 대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정보화사업 85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다만, 공개입찰 유찰 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이나 과업내용 등에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인은 없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년 상반기 중 사업부서에 안내하고,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2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총 11건이 재상정 되었는데 사업목적 변경, 설계 변경, 금액 재상정 등의 사유로 재상정 되었으며 이들 중 1건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로 인해 삭제되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최근 2년간 12건(가결 11, 삭제 1)이 재상정되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상정 사유 ※ '22~23년 재상정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합계</th><th colspan="2">변 경</th><th rowspan="2">취소</th></tr><tr><th>목적 및 용도변경</th><th>사업비 증가</th></tr><tr><td>안전</td><td>12</td><td>5</td><td>6</td><td>1</td></tr></table> - 목적변경을 통해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원화를 해소하는 건 등이 있으며, 사업비 증가는 실시설계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른 건으로 불가피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간 의회 의결권 훼손을 방지하고자 사업부서에 취소·변경 사업의 재상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독려한 결과이며, 또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이 확행되도록 교육·주지시키고 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행 및 재상정 교육 및 안내 -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공유재산 관리 철저(재산관리과-4893호, '22.12.22.) - 안전 사업부서 대면교육 ('23. 2월, 5월, 8월, 10월) - 시·구 재산관리 담당 집합교육('23.4.28.) ○ 앞으로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사업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및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심도있는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음	구분	합계	변 경		취소	목적 및 용도변경	사업비 증가	안전	12	5	6	1
구분	합계			변 경			취소						
		목적 및 용도변경	사업비 증가										
안전	12	5	6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세무조사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자치구 취득세가 과다하게 누락된 것으로 보임. 자치구 지방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매년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치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방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자치구 세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지방세관계법 개정법규 및 적용요령 교육 ('23.4월) - 세무조사 기법 공유 및 추정사례 교육 ('23.5월) - 법인 회계프로그램 설명 및 불복사례 교육 ('23.11월) - 취득세 분야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23.12월) ○ 25개 자치구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매년 13개 자치구, 격년제 점검) - 취득신고 누락, 착오감면, 법인 중과세 여부 등을 점검하여 탈루·누락 세원 발굴하고 자치구 업무지도로 동일사례 재발 방지 ○ 시·구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기법 공유 및 협업 - 자치구가 요청한 5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시·구 합동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기법 상호 공유 및 시·구 협업을 통한 소통강화 ○ 앞으로도 자치구 지방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마을 세무사들의 동별·인원별 편차도 심하고 심지어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세무사들이 많은데, 홍보와 더불어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시민동행 마을세무사 제도운영 개선계획 방침 수립 (세제과-16131, 2023.11.24.) - 1동 1마을세무사 제도 폐지 및 무실적동 통폐합 등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 제도 운영 ▷ '23년 426개동 428명→'24년 426개동 296명 -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수요집중시설로 지속적 확대시행 - 세금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제6기 마을세무사(296명) 제도 시행 ('24.1월~) - 마을세무사 위촉장 배부 및 시, 자치구, 주민센터 누리집 명단 현행화('24.1월) - 제6기 마을세무사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부('24.2월) - 복지관, 전통시장, 아파트, 쉼터 등 수요집중시설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시행('24.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재무국 소관 위원회 중 세수추계 자문회의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위원 수당 지급에 활동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 자문회의 운영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부동산 시장의 불규칙적인 거래 상황에 따른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통해 시장 전망 의견을 추계에 반영해 오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은 정부정책, 경제여건, 매매심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다양한 학계·정부·민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 특히, ’23년에는 지속된 고금리,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 외부전문가를 10명까지 확대하고 한국부동산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세수추계 자문회의’는 상설위원회보다 비상설 전문가 의견 청취 성격이 강하며, 외부전문가 선정·위원의 임기·회의 개최시기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신속,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여 법정 위원회보다는 비상설 전문가 자문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으며, 특히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외국인 체납건수가 폭증하고 있고 체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납세 의무가 있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철저히 인지도시킬 수 있도록 납세의무 홍보 강화할 것. (세무과,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법무부 보유 외국인 등록대장자료 매월 현행화 -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실거주지 파악으로 정확한 송달 ○ 고지서 발송시 외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 동봉 - 재산세(6개 언어), 자동차세(6개 언어), 주민세(8개 언어) 외국어 납부 안내문 동봉 ○ 서울외국인포털에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상식(지방세 의미, 종류, 체납시 불이익 등)” 상시 홍보중임 ○ '23년 외국인 체납방지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리플릿 19,550부, 포스터 314부)하여 자치구 및 외국인 관련기관에 홍보함 - 대상언어 : 8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간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 또한,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특별정리 추진기간 운영('23.10.~12.) ☐ 향후계획 ○ 외국인 주민 대상 지원시설을 통한 납세의무 홍보 강화 -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에 외국어 안내문 배포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세금 수납창구를 다양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외국어 안내문(세금납부 등 안내)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 ○ ETAX(PC), STAX(모바일앱)에서 영문서비스 중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 25개구 청사에 설치된 무인납부기에 영문서비스 구축 중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 향후계획 ○ 무인납부기 영문서비스 1월 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24년 재무국 정책목표에 공동과세 제도 확대 방안 반영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검토내용 ○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2년 결산 기준 강남구·강북구 간 재산세 격차가 당초 26.3배에서 5.4배로 완화되어 재정불균형 해소에 기여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 강남구 등 세수 감소 8개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자치구간 갈등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향후계획 ○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검토 - '08년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이후 시행효과 분석(공동과세 비율 및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포함) 연구용역 의뢰('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청취 등 설득 노력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을 위한 국회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청취 - 내용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50%→60%로 상향 ○ 자치구 의견청취 세부 내역 【1차 의견조회 결과】('21. 1. 28.) ① 반대(7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②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종로, 중랑 ③ 보류(1개구) : 강동 【2차 의견조회 결과】('22. 12. 12.) ① 반대(9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종로 ② 찬성(16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3차 의견조회 결과】('23. 11. 30.) ① 반대(8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②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종로 ☐ 향후계획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응 등 필요시 자치구 의견 파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세입추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함. 세외수입이 매년 추계와 징수 간 편차가 매우 크며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 매년 세외수입은 덜 걷히고, 지방세는 많이 걷혀서 세입추계와 결산상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다 정밀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변동성이 심한 경제·정책변화 여건 속에서도 세수추계 정확도를 향상하고자 '23년 시세예산은 '22년 시세예산 대비 1조 7,862억원(7.7%)를 증액 편성하였음 ○ '23년부터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법정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 세수추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23.9월) ○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해 세수추계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의결('23.10월) ☐ 향후계획 ○ 행안부 주관 '24년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에 지자체 대표로 참석('24.5월 예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 및 17개 시·도 추계 담당자 공동 세수추계 자문단 회의 참석('24.4월 예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통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의결 추진('24.10월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재무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취합 및 제출 전 단계에서 재무국의 적극적인 사전 분석·검증 및 조정을 통해 의회상정이 이루어져야 함.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재무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상정 전,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을 통해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 및 달성 가능성, 규모와 비용 및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더불어,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중요재산 해당 여부, 변경대상 여부, 1건의 의미 등 법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안건을 상정하고 있음. 향후에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38세금징수과에서는 '21년부터 선제적으로 무재산, 저소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해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체납자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알선 등 복지연계를 추진하였음 ☐ 향후계획 ○ 지방세징수법에 사회복지부서에서 사회보장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요청할 경우 체납자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23.1월 시행)에 따라,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재산, 정리보류 자료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부서에 제공할 것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시민에게 반환되지 않은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과오납금 집중 정리 실시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 5월(상반기), 11월(하반기) ○ 납세자의 환급신청 방법 다양화 - KT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문자안내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납세자 환급서비스 제공 - ETAX, STAX 등에서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 ※ 환급통지서의 QR코드를 통한 지방세 환급신청 간소화 실시(예정) ☐ 향후계획 ○ 정확한 부과 등으로 환급 최소화 - 자치구 지방세 담당 직원에 대한 세목별 정기 교육실시 - 소송 적극 대응으로 패소에 따른 지방세 환급 방지 등 노력 지속 ○ 새롭고 다양한 환급 안내 서비스 개발을 통해 납세 편의 확대 - 전체 환급 대상자를 위한 카톡 알림 및 환급 신청 서비스 구축·운영 - 환급통지서의 QR코드를 통한 지방세 환급신청 간소화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8세금징수과의 가택조사 등에 있어 공무원의 사전 법적 보호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법적근거)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개문에 대한 법규정은 구비되어 있음 ○ (안전사고) 가택수색을 위한 출장시 조사관 3인 이상 조를 이루어 실시하고, 체납자가 가택수색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협조요청, 경찰이 입회토록 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 (업무지침) 가택수색 매뉴얼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조사기법 및 현장 상황대응 등 가택수색 교육 실시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추가로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구입·착용하여 예기치 못한 돌발사항에 사전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결손 과목의 징수율에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세무과,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정리보류 대상자 실태 및 재산조사 실시로 징수율 제고 - 체납자 거주 상태 및 체납법인 실태조사 - 무재산자 신규 재산조사 - 기 압류 재산의 환가가치 체납액 충당 가능 여부 판단 ○ 지방세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사 및 압류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효중단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부동산 연 2회, 금융재산 연 4회 - 차량, 건설기계, 직장조회, 골프회원권 및 기타재산권 등 연 2회 - 사업장(점포), 인허가 조사, 거주지 등 탐문조사 실시 ○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6명)이 정리보류 체납액을 상시 집중관리하도록 하여 세금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정리보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징수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정리보류 후 정기적인 재산조사 실시(매 분기별)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정리보류 대상자 관리 철저 ○ 가택수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요청(행정안전부) : '23.12.27.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市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간 연계 강화, 사유지 내 점유물에 대한 현황(무허가건물) 입력항목 추가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세무과) : '23.12.28. - 물건(재산)구분 선택항목 변경 및 추가, 물건(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여부 검증체계 도입 등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개선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행안부 요청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 지속 추진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 지방세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편. 타 연구원에 비하여 이직율이 높은 편으로 안정적인 연구원 되도록 노력해줄 것.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연구원 위상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 확대 요청 ('23.11월)
○ 지방세연구원 직원들에게 인재개발원 교육 훈련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제공해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곳으로 외부기관 직원의 교육은 곤란 ○ 연구원에서는 연구직 역량강화를 위한 학회 학술활동 지원, 지방세, 재정 동향정보 교류 소모임, 특강 등 실시 중
○ 세입 감소에 따라 향후 서울시 재정 관리가 필요함. 학령인구 감소와 1인당 교육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과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조정에 대해 고민하길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초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로, 지자체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 악화 및 노령인구 증가로 복지지출 등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여유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은 있음 ○ 다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향후계획 ○ 평생교육국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유사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른 협의 및 검토 예정 * '사회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세 개편 방안' - '24.6월 연구용역 착수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재산세 조정교부금 지방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부서별 TF를 구성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자치구가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정권의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공동과세 조정은 자치구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 현재 공동과세 상향 입법안에 대하여 강남구 등 세수 감소 8개 자치구에서 반대 입장에 있어 TF 구성에 앞서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향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의뢰 결과 등 검토 예정 * '08년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이후 시행효과 분석' - '24.6월 연구용역 착수
○ 김포시 편입 이슈가 외형적으로는 서울시 세수 증가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포시 편입으로 사실상 재산세 공동과세 및 지역균형발전 목표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재무 건정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재무국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검토내용 ○ '23년 예산 기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시 2조 348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 시세입 4,107억원 + 도세입 5,685억원 + 세외수입 등 10,556억원 ○ 동일 예산 사업의 변동 없이 정부 지원의 감소*가 예상됨 ○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 TF에서 서울시 재무건전성 검토 *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차등 적용(약 22% 하향), 불교부단체 전환으로 지방교부세 1,380억원 감소 등 ※ 자치구 영향 : 재산세 공동과세 교부액 약 11억원씩 감소 예상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인쇄비의 경우 소액이라도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않도록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일상경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의 집행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비교, 산출기초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집행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자치구 점유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등 부과 현황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11. 6.)
○ 서울시가 점유 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부과현황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11. 6.)
○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차이가 큰 원인 파악해서 보고 요청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11. 13.)